



보도시점 2026. 5. 11.(월) 16:00(회의 시작 시) 배포 2026. 5. 8.(금) 14:30

제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 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 - 우리 강점분야인 **보건·문화 ODA 전략 마련** 및 사업 **투명성·책임 이행 강화 방안 추진**

국무총리 주재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 **(강점분야 전략)** 기존 강점 분야인 보건 및 신규 강점 분야인 문화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투명성 제고)** '26년 사업 변경 내역 및 '25년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 **(책임 이행 강화)** 사업실명제 기록이력제 도입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는 5월 11일(월)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과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 6개 안건을 논의하였다.

<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1.(월) 16: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30인
- **회의안건**
 - ①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②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③ '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안)
 - ④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1분기) 및 종합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 수정(안)
 - ⑤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안)
 - ⑥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안건 비공개)

-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2월)」에 제시된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강점분야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보건과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ODA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이번 심의·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보건 역량과 AI·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협력국 보건의료 체계를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및 보건의료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보건 ODA 전략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 ICT 기반 의료체계 등 보건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보건 협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 협력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국제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을 확대하여 보건 분야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 6대 중점과제 : ① 보건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 ②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 ③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④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⑤ 글로벌 보건 협력 선도 ⑥ 상생 파트너십 강화
 -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쉼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관계부처·기관 등)를 통한 통합형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안)

◆ 협력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호혜적 문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 정부는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문화 ODA는 협력국의 고유의 문화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ODA’를 기반으로
 - 우리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 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 ODA’를 추진한다.
 - 또한 문화유산 보호, 연수 등 전통적인 문화 ODA 범주에서 문화콘텐츠, 생활문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한 ‘창의 ODA’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 6대 중점과제 : ① 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 ② 문화창조산업 성장 지원
 - ③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 ④ ODA 전반에 문화 접목
 - ⑤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산업 성장지원 ⑥ 다각적 파트너십 확대
- 앞으로 협력국 수요기반 사업 기획, 문화 분야 제안형 ODA 도입 등을 통해 협력국과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는 문화 ODA를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3. '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안)

- 정부는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양자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행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 ▲(EDCF) 총사업비 1억불 이상 ▲(KOICA)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기타 시행기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25년에는 27개 기관, 5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정상 추진 사업은 485개(95.1%), 집행 부진 사업은 25개(4.9%)로 전년 대비 부진 사업 비율이 절반이상(54.6%, '24년 55개→'25년 25개) 감소하였다.
 - 부진 원인의 대부분은 협력국의 행정절차 지연, 정세 변화, 협력국 내부 정책 변경 등 외부 요인이 차지하였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본부) 및 주관기관(외교부, 재정경제부)을 중심으로 각 시행기관,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집행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4.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1분기) 및 종합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 수정(안)

- 정부는 '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하였다.

- 외교부 등 11개 시행기관 소관의 무상 사업 총 102건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그 중 사업 여건 변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이 8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이외에도, 협력국 정세 변화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장기부진 사업의 철회, 치안불안 사업지역 조정, 환율 상승분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등이 발생하였다.

5.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안)

-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 ▲(사업실명제) 사업 일반현황 및 담당자 실명 등 사업정보 대외 공개
- ▲(기록이력제) 사업 발굴부터 승인·집행 등 쉰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사결정과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고 그 경과를 지속 관리

- 사업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국정과제 관련 중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행기관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 사업의 일반 현황과 담당자 정보,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며 특히,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하여 ODA 사업의 발굴 경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시행기관별 공개내역은 ODA 코리아에 통합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며, '26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7년부터 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 아울러, ODA 사업명은 명칭만 보아도 일반 국민들이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사업명은 지원국가, 협력기구, 지원분야, 주요활동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약어 사용은 지양토록 하였다.

6.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 정부는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21-'25)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6-'30) 중점협력국 지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 선정된 제4기 ODA 중점협력국에 대해서는 국가협력전략(CPS)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양자 ODA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제4기 운영 기간('26~'30) 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중점협력국 재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1.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주요특징

붙임2.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안)

붙임3.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 전략(안)

붙임4. '25년 ODA 사업 집행관리 점검 결과(안)

붙임5. '2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1분기) 및
종합시행계획 기관별 사업예산 세부현황 수정(안)

붙임6. 사업실명제 및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안). 끝.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유승표 (044-200-2148)
		담당자	사무관	곽현진 (044-200-2161)
담당 부서 <안건 1,2,6>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윤정 (044-200-2157)
		담당자	사무관	송동훈 (044-200-2158)
담당 부서 <안건 3>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	책임자	과 장	맹준호 (044-200-2195)
		담당자	사무관	이효석 (044-200-2152)
담당 부서 <안건 3-1>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2-2100-8059)
		담당자	서기관	이예승 (02-2100-8138)
담당 부서 <안건 3-2>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책임자	과 장	서영환 (044-215-8770)
		담당자	사무관	윤휘연 (044-215-8772)
담당 부서 <안건 4,5>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	책임자	과 장	한레지나 (044-200-2164)
		담당자	사무관	하명균 (044-200-2166)

보건 ODA, 연대와 혁신을 통해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1

보건정책 지원·역량 강화

- ☑ 협력국 맞춤형 보건전략 수립 컨설팅
- ☑ 필수 의료시설 건립을 통한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 ☑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확대 및 한국형 보건 미네소타 프로젝트 추진



2

AI·ICT 디지털 헬스 확산

- ☑ 현지 여건을 고려한 적정기술 AI기반 비대면 진료, 진단보조 서비스 개발·보급
- ☑ AI를 활용한 질병 조기진단 및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 의료정보 전산화 및 AI·ICT 기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3

감염병 관리·대응역량 제고

- ☑ 감염병 대응 인력 양성 및 위기대응체계 전수
- ☑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 사업을 통한 백신 생산·제조인력 양성 지원
- ☑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 추진



4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

- ☑ 기후변화 취약국의 기후 대응형 보건정책 지원
- ☑ 기후민감성 질환, 온열질환 방역체계 구축
- ☑ 태풍·폭우에 안전한 친환경 보건소 설계 컨설팅



5

글로벌 보건 협력 선도

- ☑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시대 바이오헬스 혁신 논의
- ☑ 게이츠재단, 국제 NGO 등 비정부기구와 협력
- ☑ 주요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확대



6

상생 파트너십 강화

- ☑ 우수 바이오 기업과 국제보건기구 간 협력 활성화
- ☑ 보건의료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 현장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시민단체와 협력 확대



문화 ODA, 협력국 중심의 문화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형 문화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 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

- ☑ 법령, 정책 컨설팅을 통한 문예진흥기반 조성
-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기초 문예교육 지원
- ☑ 예술인재 장학사업 확대를 통한 청년예술인 양성



2 문화창조산업 성장 지원

- ☑ 영상·공연 제작기술 전수 및 콘텐츠 공동 제작
- ☑ 공연장·상영관 및 교육시설을 통합한 복합예술공간 구축
-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3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 ODA

- ☑ 현지 진출기업 취업, 유학희망자에게 언어교육 실시
- ☑ 스포츠 유망주 대상 전문훈련을 통한 국제대회 출전 지원
- ☑ 현지 환경을 반영한 문화상품 개발로 경제적 자립 지원



4 ODA 전반에 문화 접목

- ☑ 문화예술교육, 전시 등 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문화 융합형 인프라 구축
- ☑ 문예 교육, 문화유산 보호 등에 디지털콘텐츠 접목
- ☑ 청년층 대상 자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 육성



5 문화유산·관광 지원 강화

- ☑ AI·ICT 기반 문화유산 수리·보존, 디지털박물관 건립
- ☑ 협력국 내 주요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 ☑ 콘텐츠 개발 및 지역문화 자산의 관광상품화 지원



6 다각적 파트너십 확대

- ☑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과 협력 확대
- ☑ 우리 청년봉사단과 현지 청년 협업을 통한 공동창작, 합동전시·공연 추진
- ☑ 유네스코, 세계 관광기구 등과 공동사업 발굴



1 추진배경 및 국내외 현황

- **(배경)** 코로나 팬데믹 후 국제 보건협력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기후·인구·기술 변화의 영향으로 글로벌 보건 불평등이 심화
- **(현황)** 선진 공여국의 ODA 예산 축소*에 따라 보건 환경이 악화
 - * ▲(美) USAID 폐지, '26년 예산안 전년대비 16% 삭감 ▲(英) '27년까지 축소(GNI 대비 0.5→0.3%)
 - 한국도 보건 ODA 규모를 축소 중이나 차별화된 경험과 우수한 방역 시스템, ICT 기반 의료체계 등 보건분야 강점을 다수 보유
 - ⇒ 우리의 보건 역량과 AI·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 ODA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및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에 기여

2 기본 방향

-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 협력국 보건의료 분야 발전 수준에 따라 기초보건의료 체계를 확충하면서 AI·ICT 등 혁신기술 기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 보건 분야 발전 수준별 지원목표(안) 】

발전 수준	저개발 국가	중진 개도국
지원목표	기초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보건시스템 강화	보건의료 분야 질적 향상
중점분야	1차·필수 보건체계 개선, 감염병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보급 및 보건의료 체계 고도화
수단	무상원조 중심	유·무상원조 연계 강화

- 국제보건기구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과의 협력 확대
 - GAVI, CEPI, 글로벌펀드를 비롯한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 기여 확대 지원
- 통합적인 사업 설계 및 집행을 통한 보건 ODA 효과성 제고
 -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해 인프라·인력·정책·기술 등을 연계한 통합형 사업을 설계·추진

3 6대 중점과제

<p>① 보건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정책 컨설팅과 기초보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수립 컨설팅 - 필수 의료시설 건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 보건의료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의대·의료기관과 매칭을 통해 선진기술을 전수하는 한국형 보건 미네소타 프로그램 추진
<p>② AI·ICT 기반 디지털 헬스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현지에서 운영 가능한 적정기술 AI 기반 비대면 진료, 진단보조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제공 ✓ AI 기반 디지털 보건행정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정보 전산화,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행정 효율화
<p>③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과 위기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이 감염병 발병·확산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체계 전수, 전문인력 양성 및 공동 도상훈련 실시 ✓ 감염병 대비 연구·생산역량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행 병원체 진단·분석 기술, 저가 백신 연구개발 지원 - WHO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 허브 사업을 통해 인력 양성
<p>④ 기후대응 보건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체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취약국의 기후 대응형 보건정책 수립 지원 - 기후 민감성 질환(말라리아 등) 방역체계 및 진단·치료방안 마련 ✓ 기후변화 대응력을 갖춘 의료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태풍 등의 영향에서 안전한 친환경 보건소 설계 컨설팅
<p>⑤ 글로벌 보건 협력 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보건 이니셔티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집행이사회 등 국제보건 규범 논의 적극 참여 -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AI시대 바이오헬스 혁신방안 논의 ✓ 다자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펀드, GAVI, CEPI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 확대
<p>⑥ 상생 파트너십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 분야 협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을 위한 글로벌 보건 R&D 협력 확대 ✓ 시민사회와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 발굴

4 이행방안

- △국별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확산 △유·무상 연계 및 패키지 사업 활성화 △시그니처 사업 확대(결핵·말라리아 퇴치 신규사업 도입 등)

1 추진배경 및 국내외 현황

- **(배경)** 문화는 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 분야로 협력 필요성이 높으며, 우리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주목*
 -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 '긍정적' 72.8%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70.3%
 - ▲한국 문화콘텐츠 '추천의향 있음' 68.2% (문체부, '25년 해외한류 실태조사)
- **(현황)** 프랑스, 일본 등 국제사회는 문화유산 보존 外 자국 언어·문화 전파, 교육·스포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우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문화 ODA를 추진 중으로 문화 ODA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사업 다양성이 부족
 - * '26년 문화 ODA는 총 40개 사업, 약 296억원으로 전체 양자 ODA의 0.67% 수준
 - ⇒ 상호존중 기반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 및 호혜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상생형 문화 ODA 추진전략 수립

2 기본 방향

- **(상생 ODA)** 협력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현지 수요를 고려해 접근
 - 기본적 사회·경제적 수요가 충족된 중소득국을 우선 지원하되 최저개발국은 기초인프라 조성을 통해 최소한의 문화복지 보장

【 협력국 발전 수준별 지원 목표(안) 】

지역	최저개발국	하위 중소득국	상위 중소득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문화시설 등 기초인프라 구축 ✓ 문화유산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 확대 ✓ 복합문화공간 조성, 콘텐츠 창작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창조산업 지원 ✓ 문화유산 디지털화 및 관광 연계

- **(혁신 ODA)** 우리의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
- **(창의 ODA)** 문화유산 보호, 연수 등 전통적인 문화 ODA 범주에서 문화콘텐츠(영상·공연·음악 등), 생활문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

3 6대 중점과제

<p>① 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발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법령, 정책 컨설팅을 통해 문예진흥기반 조성 ✓ 문화예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대상 기초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접근성 향상 - AMA+,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예술인 지원
<p>② 문화창조산업 성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 창작 및 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공연 제작기술 전수, 협력국 문화와 접목한 콘텐츠 공동제작 ✓ 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및 스타트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웹툰·게임 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 설립
<p>③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 O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유학과 연계한 언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기업 취업, 유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교육 실시 ✓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스포츠 유망주의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드림 투 아레나(Dream to Arena)' 사업 추진 ✓ 지역사회 문화복지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지리·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문화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p>④ ODA 전반에 문화를 접목한 OD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ODA 사업에 문화적 요소 접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인프라 건립시 문예교육, 전시 등 문화적 요소 접목 ✓ 협력국에 대한 대내외 인식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국 청년층을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로 육성
<p>⑤ 문화유산 보호 및 관광산업 성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ICT 기반 문화유산 보호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한 문화유산 연구·보호 지원 - 협력국 내 주요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지원 ✓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문화 자산(전통축제 등)의 상품화 지원
<p>⑥ 다각적 파트너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의 CTS, IB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화기업과 협력 강화 ✓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 관광기구 등 국제문화기구와 공동사업 발굴

4 이행방안

- △정상외교와 대외정책 지원 강화(후속 사업발굴), △제안형 ODA 도입
- △ 수요조사 기반 사업 기획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성과 확보

1 개요

- 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사업 발생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양자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집행관리 점검 실시('24년 도입)
 - * ▲ (EDCF) 총사업비 1억불 이상 ▲ (KOICA)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 ▲ (기타 시행기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25년에는 27개 기관, 510개 사업(64개 협력국) 대상 상시 관리 체계 운영

2 점검결과 및 부진분석

- (집행 현황) 총 510개 사업중 정상 추진 485개(95.1%), 집행부진 25개(4.9%)로, 전년 대비 부진사업 비율 54.6% 감소('24년 55개→'25년 25개)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화 등을 반영, 32개(6.3%) 사업을 선제적으로 조정(철회)
- (부진 원인)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정세 변화, 수원국 내부 정책 변경 등 ODA 사업 특성에 따른 외부 요인이 대다수(24개 사업)

3 부진사업 대응 및 조치

- 국조실 및 주관기관 중심으로 부진 원인 분석 및 상황별 대응조치 추진
 - 사업별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일시 중단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외 공관·수원국 협의체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 해소·사업 정상화 노력 병행
 -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 철회하여 불필요 재정 집행 방지

4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 분기별 집행점검 체계 정착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유지·강화
- 집행관리 데이터 축적 기반 확보 → 사업 지연요인* 유형별 분석 강화
 - * 국내절차 지연, 수원국 행정절차 지연, 수원국 정세 변화, 불가항력적 사유 등
- 집행관리 결과를 ODA 사업 성과관리 체계와 연계한 정책 활용 추진

1 추진배경

- **(추진배경)** 제7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4.2월)에서 의결된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분과회의」 신설
 -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는 ‘24년부터 분기별로 동 회의 개최 중

2 ‘25년도 집행관리 점검 결과 (주요 성과 및 개선방안)

‘25년 총 4회 집행관리 분과회의(대면 2회, 화상 2회) 개최 및 16개 시행기관 169개 사업 점검을 통해,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 **(현장 점검·환류 강화)** 재외공관 모니터링, ODA 현지협의체, 민관 합동 모니터링 결과와 집행관리 분과회의 점검 결과 간 상호 환류 강화
 - 재외공관의 사업 현황 수시 점검 결과를 집행관리 분과회의에서 검토,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재외공관 지원 필요사항 식별

※ 매 분기 각 시행기관이 ODA 통합정보포털에 입력한 집행부진 사업(‘25년 103건) 이외에도,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재외공관 ODA 현지협의체 논의 결과, ▲사업별 실집행을 점검 등을 통해 특이사항이 파악된 사업을 추가로 선별하여 점검(‘25년 59건)

- 2025년 민관합동 무상사업 모니터링* 신규 도입, 민간 역량 기반 현지 모니터링(6개국 24개 사업)을 통해 전문적·체계적 사업 점검 실시
- **(재외공관 지원 강화)** 재외공관 - 수원총괄기관 수시·정례 협의를 통해 사업 집행 애로사항 해결 지원
 - ※ 재외공관 협조/지원을 통해 통관 지연 문제 해소 및 사업 완료(노동부, 스리랑카), 그간 지연되었던 R/D 내 수원국 측 분담사항 합의 완료(환경부, 이집트)
 - ▲주요 수원국과의 유무상 통합정책협의회(‘25.12, 인니), ▲재외공관-수원국 협의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식별된 애로사항 제기 및 해결 방안 모색
- **(반복적 무상원조사업 효과성 점검)** 20개 부처·청의 39개 유형 반복 사업(다국가 유사 사업, 다년도 반복 사업) 효과성 자체점검 실시
 - 각 반복 사업이 수원국 사업 여건·환경 및 수요에 부합하도록 기획되었는지 검토,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구조조정에 반영

- **(추가 개선 방안)** 사업 집행 부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획조사 필요성 확인
 - ▲수원국측 분담 요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미흡하여 사업 개시 후 사업 핵심요소 변경, ▲사업 추진 관련 수원국 법·제도 사전 분석 미비로 사업 지연 초래 등
 - ⇒ (대응방안) 사전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제고, 수원국 사업환경 및 위험요인 분석 등 기획조사 강화
 -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의도했던 연계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거나 하나의 사업 지연이 연계사업 전체에 부정적 영향 초래
 - ⇒ (대응방안) 향후 연계사업의 집행관리 및 성과 점검 확대, 현장 모니터링 강화 추진
- ※ '25.12월 연계 대상 무상사업 추가 점검 실시, ▲기관 간 협의 미흡, ▲ 단순 정보 공유 수준의 연계 추진 건은 연계 대상 사업에서 제외(108건 256개 사업 → 51건 102개 사업)

3 향후 조치계획

- '26년 분기별 집행관리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각 시행기관 사업 집행 현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방안, ▲주관기관 지원사항 등 지속 협의
 - 집행관리 분과회의 개최 결과는 매 분기 시행기관·재외공관에 회람 하고, '26년 분과회의 개최 결과를 '27년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
 - ※ '25년 1분기 집행관리 분과회의는 3월 서면 개최
- 집행부진 사업과 재외공관 ODA 현지협의체 및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이 파악된 사업 지속 점검, 현장 - 사업 시행기관 간 소통·환류 강화
 - 집행관리 분과회의 논의 결과 및 시행기관의 후속조치 사항을 재외공관에 공유하여, 사업의 철저한 이행점검 모색
 - 필요시 재외공관의 수원총괄기관과의 수시·정례협의를 통해 수원국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및 분담사항 이행 요청
- 집행관리 결과 사업 효과성 또는 사업 수행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구조조정 검토
 - 사업 관리 부실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 심사 시 반영

1 점검 개요

- (점검대상) 총 71건
- (점검방식) ① EDCF 현안점검회의를 통한 정기 점검(주관기관),
② 국가별·사업별 집행실적·전망 수시 점검(시행기관)
- (점검내용) ‘사업단계별 집행관리방안*’(‘24-’26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라 사업 소단계(승인-계약-구매)에 걸친 종합적 점검·관리
 - 정기 점검시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부진 발생 여부 등 점검 및 수시 점검시 상세 집행실적, 집행 전망 및 예정 시기 등 확인

2 집행관리 성과

- (수원국 직접협의*) 수원국의 과업구조 변경 요청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정부간 EDCF 정책협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 * (사례) EDCF 정책협의(‘25.上) 계기, 해상교통안전 개선사업 관련 사업 범위 협의
 - 또한, 정책협의 이후 현지사무소는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지연 해소 완료
- (현장 실사*) 수원국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현지 실사·검토 실시
 - * (사례) 종합병원 건립 관련 공공성이 낮은 설계 변경 요청(‘25.上)
→ 관계자 현장 실사, 재외공관-수원국 협의 → 수원국 요청 철회(‘25.下)
 - 수원국 요청의 적정성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설명하고 공관을 거쳐 추가협의 → 수원국은 해당 요구 철회, 정상 추진
- (수원국에 진행촉구*) 新정부 출범 등 수원국 정치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세 변동시 수원국에 사업추진 지속 촉구
 - * (사례) 우간다 신정부,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 등

- **(집행상황 점검)** 주관·시행기관 공동으로 EDCF 현안점검회의에서 집행총량 및 사업별 애로사항을 파악·점검
 - 분기별 점검을 통해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 이와 같은 다각적·지속적인 집행관리 노력으로, '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 집행실적(18,710억원)** 및 **집행을 90%** 달성

- 또한, 전년대비 **부진사업 개수(△10개)** 및 **부진율(△10.9%p)** 축소*

* (부진사업 개수: △10개) '24년 20개 → '25년 10개
 (부진율: △10.9%p) '24년 25% → '25년 14.1%

- 다만, 집행부진 발생의 주요 원인은 수원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거시경제 불안, 내부 소요사태** 등

* (사례) ①소요사태, 강진 등으로 사업중단, ②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사업중단 등

3 집행관리 추가 강화방안

- **(현장 사업관리)** 매년 특정지역·분야를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외공관과의 연계 강화로 집행현황 모니터링 강화*
 - * 현지사무소는 수원국과 구매·집행 전망을 수시 협의하고 수원국 상황 변화에 따른 지연 발생 가능성을 신속 파악
- **(맞춤형 지원)** 사업지연 우려가 높은 중점협력국 대상 PMA* 파견 및 현지 인재 채용으로 수원국 내 의사소통을 개선, 집행관리 실효성 제고
 - * Project Management Advisor(사업관리자문단) : 수원국 입장에서 수원국 정부에 기술 자문 등을 전담 지원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예산 편성)** 'EDCF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집행관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불용 최소화** 추진

4 향후 추진계획

- '25년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관리 강화*
 - *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저하되었거나, 수원국 사정으로 절차가 장기지연된 사업에 대한 취소 검토
- EDCF 현안점검회의에서 사업 집행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해소방안 논의 지속 실시 → '27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집행현황 점검 보고**

1 주요 변경 내용

-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수립(2월) 이후,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변경 발생시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이 승인한 분기별 변경 내역을 국개위 상정
 -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8항 ▲ 국개위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 외교부·복지부·국토부 등 11개 기관에서 무상사업 총 102건* 변경
 - * ▲ 외교부(KOICA) 75건 ▲ 복지부 11건 ▲ 국토부 8건 등
 - (사업기간 변경) 사업 여건 변화(협력국 정세 불안정, 자연재해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 증액 없이 1~2년 기간 연장 83건
 - (사업 철회) ▲ 협력국 정세 불안정 ▲ 내부 행정절차 장기 지연 ▲ 협력국·유관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장기부진 사업 등 11건

2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 '26년 종합시행계획 붙임 내 기관별 총사업목록 중 재경부 다자성 양자(무상)사업 2건 수정 의결
 - (경위)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및 기관별 사업목록 확인 요청(국조실, 2.5) → 외교부에 제출한 요구안으로 수정·제출(재경부, 2.6)
 - * ①(GGGI 신탁기금) 총사업비 증액(390→990억), 사업기간 연장('26년→'30년 종료)
 - ②(UNFCCC 사업) 총사업비 오기(112.1 → 212.1억원)
 - (수정 의결)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붙임 자료 내 기관별 총 사업 목록 수정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원)	'26년 예산 (억원)	신규/계속	총사업 기간	구분 (양·다자)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GGGI 신탁기금	프로그램	(기존)990.00 (수정)390.00	150.00	계속	(기존)2022-2030 (수정)2022-2026	다자성 양자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UNFCCC 수요기반 프로젝트	프로그램	(기존)212.10 (수정)112.1	30.70	계속	2025-2029	다자성 양자

- (재발 방지) 향후 자료 검토시 무상분야 시행계획 확정안과 종합시행계획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재경부)

1 사업 실명제 가이드라인

1 추진 배경

-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하고 ODA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별도 관리 필요
 - *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반영

2 세부 내용

- (사업실명제) 사업 일반현황 및 담당자 실명 등 사업정보 대외 공개
- (기록이력제) 사업 발굴부터 승인·집행 등 **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사결정과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고 그 경과를 지속 관리

- (대상기관) 당해연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상 ODA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26년도 기준 37개, 지자체 포함)
 - * KOICA와 EDCF를 포함한 산하·소속기관 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총괄 관리
- (사업선정) 기본방향*을 원칙으로, 시행기관은 기관별 예산규모·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
 - * ▲대규모 예산 투입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이행관계자 관심 사업 등
 - 각 기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 *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및 절차를 준용
- (사업공개) 기관별 대상 사업 목록과 사업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기획·편성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
 - 다만, 외교·안보상 비밀 유지 필요 등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내부 관리하고 요약·비식별 정보 중심으로 외부 공개
 - 공개 사항은 매년 말 국조실로 제출, ODA 코리아에 통합 공개*
 - * ODA 코리아에 ‘사업실명제 코너’ 개설 후 기관별 대상사업 리스트와 사업내역서 업로드

3 향후 계획

- KOICA·EDCF 사업 대상으로 시범 실시(‘26년도 下) 후, 쏘 시행기관 대상으로 사업실명제 도입(‘27년도~)

2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

1 추진 배경

- ODA 사업명은 단순 표기 문제를 넘어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국민 이해도 제고, ODA 정책 브랜딩과 직결된 정책 설계의 출발점
*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쉽고 직관적인 ODA 사업명 설정 과제 반영

2 기본 원칙

- ODA 사업명은 명칭만 보아도 일반 국민들이 핵심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으로 설정
 -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약어 사용은 지양
- 사업명에는 ▲국가·대상기구 ▲분야·내용 등 핵심내용 반영
 - (양자) ‘국가·지역 + 분야·대상 + 주요활동’ 구조로, 협력국·수혜자·성과 등이 드러나도록 사업명 설정
 - (다자) 사업분담금, 신탁기금 등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대상기구 ▲분야·대상 ▲지원사업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3 사업명 예시

- ▲국가·지역 ▲협력기구 ▲지원 분야 ▲주요활동 등 핵심내용 반영
* 지원 국가·지역 또는 협력 대상 국제기구가 특정되는 경우 사업명에 반영
- 전문용어·약어는 쉽게 풀어서 사용하거나 전체명칭과 병기
* (기존) TVET 강화→ (개선)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강화 등
-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추상적·포괄적 표현*은 지원 분야·내용·수단 및 수혜대상 등을 함께 제시해 구체화
* ▲역량강화 ▲인프라 확충 ▲혁신 ▲고도화 등

4 향후 계획

- 신규 사업 기획·발굴 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명 설정
- 사업명 수정이 필요한 계속사업은, 수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점진적 확대
* 다만, 사업명 수정 시 협력국·국제기구·민간 등 이해관계자 혼선 또는 협력 관행의 단절 우려가 없는지, 외부에 사업명이 이미 널리 인지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